

지방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정종관 |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팀장

올해 노벨 평화상을 앨 고어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공동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인간안보와 세계평화에 핵심 사안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앨 고어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루었다.

한편 IPCC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기후변화 예측을 통해 인류의 대응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인류 생존의 위기로 다가온 급박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크게 완화, 적응,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완화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 그러자면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적응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포함한다. 그리고 협상은 완화와 적응에 대해 국제적인 감축노력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대응능력을 인정받고 국제적인 위상 확보를 담고 있다.

*이 글은 중도일보(2007. 12. 3)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러한 종합적인 흐름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중순 IPCC 총회에서 기후변화 평가에 관한 종합보고서가 승인을 받은 이래, 오는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제1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3)를 통해 2013년부터 적용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번 당사국 총회 결과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저탄소 경제를 지향하는 미래의 움직임에 대해 신속하고도 확실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금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실한 해법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의 강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 상승과 함께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짐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여기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남은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국 대비 14%를 점하고 있어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 주요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로 이어지는 법.

신기술 개발로 저탄소 고효율의 제품 개발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탄소펀드와 탄소거래 등의 새로운 상품 시장영역도 나오게 된다. 그 이외에도 온난화 대응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태양광, 풍력, 조력 이외에 바이오에너지를 들 수 있다. 온난화는 결국 땅 속에 묻힌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탄소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 따라서 식물에서 얻는 에너지는 태워도 광합성 과정을 통해 다시 흡수되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OPINION

충남 지역은 농경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유휴지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채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극단적이기는 하나 에너지 사용량이 초과하여 심각한 탄소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탄소포집과 저장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된다.

이러한 지구위기 상황에서도 사전에 대비한 국가나 지방은 선점한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국제 환경협상 게임에서 계속 승자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지방, 기업, 주민 모두 총력전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사업화나 연계 정책의 추진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길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